

“요소수 부족, 농·산업 분야 재난 인정해야”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전북도 TF팀과 비상 긴급대책회의

전북도의회가 요소수 부족 사태를 농·산업 분야 재난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대응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청 요소수 수급 비상 대책 TF팀으로부터 정부 및 업계 동향·분야별 추진상황, 공공·민간 부문별 요소수 비축량과 운행 가능 기한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송지웅 의장은 “정부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선제 대응과 함께 요소수 부족 사태 해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와 자매결연 국적인 중

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해서라도 요소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요소수 문제 장기화 가능성과 함께, 불안 해소를 위해 비축량 현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도민에게 공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일 부의장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는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요소수 문제를 코로나19에 준하는 농·산업 분야 재난으로 인정하고, 도와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부의장은 “요소비료는 마늘과 양파 등 농작물에 윷거리를 줄 때 필요하다”며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등계작물 재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오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단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생긴 트래티와 콤비인, 경운기 등도 요소수가 필요하다”며 “요소수 공급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빌률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요소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간 및 공공부문 요소수 공급 등이 차질 없이 주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에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시내버스·시외버스·화물차량 등 1만56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255대, 소방차 264대를 포함한 공공기관 차량 734대, 트랙터 콤비인 등 농기계 5,770대 등 모두 2만,921여 대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도청 요소수 수급 비상 대책 TF팀으로부터 정부 및 업계 동향·분야별 추진상황, 공공·민간 부문별 요소수 비축량과 운행 가능 기한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모색

조지훈 전 경진원장, ‘청세’ 찾아 애로사항 청취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로 주목 받는 주식회사 청세(대표 이기희)를 방문해 성장 노하우를 배우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전주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머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지난 4월부터 기획·시작한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열 번째다.

조 전 원장이 이날 찾은 청세는 친환경 세탁 스타트업의 대표주자로, 세탁소의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O2O 친환경 세탁 서비스 브랜드 ‘청춘세탁’과 생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부터 제조생산, 판매, 납품(OEM/ODM)까지 하는 생활용품 브랜드 ‘청춘생활’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름을 용매로 사용하는 일반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과 달리, 오직 100% 물과 청세가 자체적으로



연구·제조·생산하는 친환경 특수 세제를 활용해 세탁하는 친환경 세탁공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 세탁시장에 돌풍을 몰고 왔다.

이를 기반으로 청세는 현재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끈 이기희 대표는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청세의 걸어온 길은 되짚던 조 전 원장은 “대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세탁물을 모아 세탁소에 가져다주는 세탁 대행서비스를 시작으로 7여년 만에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

랜드를 갖추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시대의 요구를 아는 아이디어에 열정과 임념이 더해진 결과로, 이런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희 대표는 “창업은 장사와 사업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창업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기에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하고 이를 통해 우리민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청년을 기업을 유입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생태계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지훈 전 원장은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는 청년들이 많더라. 이들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한 뒤 “앞으로도 청년에게 배우다’를 통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에 집중,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청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윤상 기자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 특단의 대책 절실”

김대중 도의원 “최근 3년간 폭행 피해 11건, 갈수록 늘어”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15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총 11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동안 소방본부가 지나치게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대부분의 폭행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단순 실

수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증거확보를 위한 구급차 내 cctv 및 바디캠 등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은 “18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도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소방본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군산교육문화회관 감사, 표적 수사 의혹 감출 수 없어”

교육위, 5개 의안심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군산교육문화회관에 감사권을 미흡하다고 판단해 미진부서로 지정한 것을 15일, 송용섭 감사관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를 이어갔다.

최영일 의원(순천)은 “교감이 감사관을 직무 배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기회에 감사관실 전체가

철저하게 조사돼 부당한 감사권이 행해진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수많은 민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감사관의 방법과 절차가 현장의 시각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받아들이고 감사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고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소방공무원 안전에도 관심을”

행자위, “119 허위신고, 강력 대응 통해 근절해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5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 해외 입국자 수송지원이 1만6,684명(10월 11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방대원들이 업무 과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19 김염병 대응과 함께,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과

비를 보강·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국 9개 광역도 중 충북, 전주, 제주만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감이리며, 180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이 주어진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설득과 논리 개발로 내년 상반기에는 소방본부장이 소방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전주 광역시 승격 전략 전환 필요”

김윤권 전주시의원 “인구 100만과 같은 과거 기준 없애야”



이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불균형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광역시 부재로 인해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과 저출생·수도권 집중화·지역 일자리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권 설정, 메가시티를 통해 불균형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광역시 없는 지역에서 거점이 될 민한 도시의 물질을 키워 광역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고 그 중심에 전주 단일 광역시에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불균형과 지역 인구 소멸의 시기에 인구 100만과 같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 광역 승격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북과 전주를 평생 결단에 머물리는 말과 같다”며 “전주의 광역시를 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호남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고, 양성한 진영논리와 관계에 대한 편목민이 남았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별전과 나리의 미래를 위해 학교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노력하고 지역주민과 자를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속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용호 의원, 민주 복당 철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은 15일 민주당에 신청했던 복당을 철회한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후 반년도 더 지났지만 민주당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배권주의 때문에 저의 복당 문제 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부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순을 놓아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유감을 표했다. 이어 민주당에 입장한다고 해 정치가 꽂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정치가 끌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의 정치적 문명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며, 복당신청서류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호남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고, 양성한 진영논리와 관계에 대한 편목민이 남았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별전과 나리의 미래를 위해 학교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노력하고 지역주민과 자를 사랑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속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용근 도의원

전북연합신문사장 감사패



회복지 분야 집행부 845억원 중 노인 통합돌봄 분야만 2624억원으로 32%가 집행부 자체 재정 부담이 큰 편이다.

또 사회복지예산은 70% 이상이 보조금 재원으로 의존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런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추진해 미래 복지정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보건 복지증진사업이 실현성 있게 진행됐는지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